

‘탄핵 정국’ 조기 대선…호남 민심 중대 변수로

광주·전남 ‘그랜드 디자인’ 짜자

후보들 수용 가능한 대선공약 제시…지역발전 기회로

광주시·전남도·정치권 머리 맞대고 장기 비전 발굴을

올해는 치러지는 제19대 대선에 대비해 광주·전남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그랜드 디자인’ 설계가 시급하다.

〈관련기사 3면〉

특히 ‘탄핵 정국’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호남 민심이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어 후보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선 공약을 제시해 지역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장기 비전을 발굴하는 것은 물론, 예산확보 계획 등 실현 방안까지 강구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 발전을 위한 대선 공약 발굴에 전념하고 있다. 이달 중 대선공약 발굴 워크숍을 개최해 초안을 완성해 2월 중 토론회를 개최한 뒤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광주시는 신성장 산업밸리 조성, 친환경 경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등 신산업 도시로서의 제2도약을 통해 낙후하고 풍요로운 광주 건설에 초점을 맞췄다.

전남도는 산업과 문예의 무용, 환경과 생태 보존, 200만 인구 회복으로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변화에서 중심거점으로 거듭나는 목표를 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광주 미래비전 자문단 운영을 통해 대형 국책사업과 파급효과가 큰 지역 간 연계 협력사업 등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사업 47건의 대선 공약을 발굴했다.

자율지능형 스마트 E-시티 조성, 차세대 기초과학연구 클러스터 조성, 국립조미세면지 연구소 광주 건립, 광주 신성장 산업밸리 조성 등 지역형 미래 먹거리 사업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광주시·전남도 발굴 19대 대선 주요 공약 사업

□광주	
광주 신성장 산업밸리 조성	(1조)
광주역 복합 거점공간 조성	(1000억)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	(5조7000억)
수소자동차 허브도시 조성사업	(1조2299억)
차세대 기초과학연구 클러스터 조성	(1조 300억)
광주~대구 내륙철도건설	(4조8987억)
□전남	
무안 국제공항 서남권 거점공항 육성	(1500억)
서울(목포)~제주 고속철도 건설	(16조8000억)
고성능 슈퍼카 산업기지 조성	(4730억)
에너지 신산업 융합 생태계 조성	(2조1080억)
생물의약 집적단지 조성	(7100억)
첨단 생명농업단지 조성	(1000억)

특히 지역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선정해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11월부터 10개 분야 123명으로 대선 지역공약 자체발굴 T/F팀을 구성해 77건을 발굴해 보고와 토론을 거쳐 대상과제를 55건으로 압축한 바 있다. 현재 이들 과제의 완성도를 높이고 광주시와 공동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광주전남연구원과 협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55개 과제 중 우선 핵심과제(안)로, 13개 과제를 선별하기도 했다.

13개의 과제는 크게 기반시설(SOC), 산업·경제, 농림수산, 환경·기타 분야로 나뉜다. 무안국제공항 서남권 거점공항 육성, 고성능 슈퍼카 산업기지 조성, 수산식품 수출전문단지 조성, 섬진강 살리기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덴마크 경찰에 구금되는 정유라 덴마크 올보르시 경찰에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된 정유라 씨(오른쪽)가 2일(현지시간) 올보르 법원에서 예비심리를 마친 뒤 다시 구금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연합뉴스

옛 광주은행 건물 유리창 3장 탄흔 청년이 미래다
5·18 헬기사격 여부 감시 의뢰 ▶6면 광주 발산마을의 ‘청년 발산’ ▶18면

‘세월오월’ 전시 불허 수사

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 실제 적용 여부 추적

광주시·비엔날레 재단 서류 요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검검사팀이 박 대통령을 풍자한 걸개그림 ‘세월오월’의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전시불허와 관련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실제 문화 현장에서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배제하기 위해 적용됐는지 여부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특검팀이 세월오월 전시와 관련한 서류 일체를 제출해달라고 시에 통보했다. 작가 선정 과정, 예산지원 내역 등 시와 광주비엔날레 재단에서 작성한 문서 일체를 요구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와 관련, 세월오월 전시불허에는 김 중 전 문화체육부 2차관의 압력성 전화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앞장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전 차관은 현재 구속된 상태다.

‘세월오월’(가로 10.5m·세로 2.5m)은 2014년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특별전 출품작이다. 민중미술가 홍성담씨 등은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정희 전 대통령에 허수아비 모습의 박근혜 대통령을 조종하는 모습을 그렸다.

광주시는 작품 논란이 확산하자 비엔날레 재단에 공문을 보내 ‘특별전 작품 중 걸개그림의 일부 내용이 재단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의 목표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출연금의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홍씨는 결국 작품을 전시장에서 자진철수했고 전시 큐레이터인 윤범모 가천대 교수와 이용우 광주비엔날레



대형 걸개그림 ‘세월오월’ 중 박근혜 대통령 풍자 부분.

대표가 사퇴, 파문이 확산됐다.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 등 12개 문화예술단체는 이와 관련, 지난 12일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김 전 실장과 조운선 문화체육부 장관 등을 특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김 전 실장이 2014년 8월 세월호 참사를 풍자한 ‘세월오월’의 광주비엔날레 전시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운선 장관과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제1차관 등 3명을 고발했다. 국정특위가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증이다.

조 장관 등 3명은 청와대와 문제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30일 1차 기관보고와 지난달 15일 4차 청문회 등에서 “블랙리스트는 없고,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다”, “대통령 지시를 받고 문화창조융합본부장 여명숙에게 그만두라고 압력을 가한 적 없다”는 등의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朴 불참에…탄핵심판 첫 변론 9분 만에 종료

내일 2차 변론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이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개정 9분 만에 조기 종료됐다.

〈관련기사 3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현재소장)는 3일 오후 2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5일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법은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한다. 현재는 2차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현재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없이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회 측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답변 전문 기사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국회 측은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에 최순실씨를 지원한 간접 정황이 포함됐다고 본다. 5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에는 청와대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과 윤전주·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 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대한상공회의소 선정

축하합니다!

기업 만족도 ‘**광산구** 전국 **1위**’

소촌농공단지운영협의회 / 평동산단운영협의회 / 평동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자협의회